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해야”

김희수 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도의회 본회의서 채택... “농어업분야 전문병원으로 특화”

전북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24일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김희수 도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272만 개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897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0만 3,379명에 이르고 요양재해율은 0.57%로 5년 전에 비해 요양재해자가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실제 전북에 산재병원이 없어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이 전국 평균 21.4%에 훨씬 못 미치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농업분야 산재 전문병원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더 이상 정부는 전라북도 산재환자들은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전이나 순천까지 가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고, 57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며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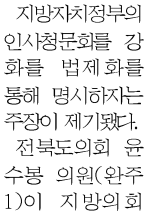
한편 전북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같은 기간 전북의 요양재해자는 3,998명, 요양재해율은 0.7%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이처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료기관이 권역별로 13개 병원이 운영 중인데 전북에는 산재의료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어 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윤수봉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윤수봉 도의원

지방자치정부의 인사청문회를 강화할 법제화를 통해 명시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첫 인사청문회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4월에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조차 아직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 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법적근거가 없으니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인간됨을 쏟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광주 북구)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계류 중이다. /김경수 기자

윤정훈 도의원, “노인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축소 철회를”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정훈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2023년 정부예산 총지출은 5.2%가 증가했고, 2023년도 사회복지예산도 전년도보다 6.4%가 증가했음에도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편성했다’라며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차가운 나라, 수동적 경제, 빈곤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10명 중 4명 이상은 노령연금도 없이 생계를 꾸려 가고 있고,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빈곤인화와 건강유지, 정서적 우울 감소, 치매와 고독사를 감소시키고 각종 사회문제 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관심도 없고, 사회활동 대기자 수이나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공공형 사회활동 지원 사업예산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기자

“양곡관리법, 내년 설 명절 전 통과 예상”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 담야...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국감 결과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시한을 내년 설명절 이전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종료에 맞춰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국정감사 소회 및 현안 등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생산조성을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직상장까지 가더라도 설명절 이전인 1월경에는 해당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와 국민이 합의 해당 법안을 ‘공산화법’으로 매도하며 망언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국가재정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왜곡하며, 대통령은 가망 것처럼 왜곡하며,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도 시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십자 정부와 여당의 막말과 왜곡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

고서를 통해 오는 2030년 1조4000억원의 격리비용이 든다는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할 경우 예산 소요액은 144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관련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KERI 연구원이 참고인 으로 출석해 반쪽짜리 연구결과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KERI는 이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배

경과 실체를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거짓 선동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소산·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해안피복 기술원 서해겨점연구소 새만금권역 건립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국가 재정전환, 특성화항만 추진 △농협 케이컬의 신속한 전북 이전 추진 △김제공항부지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크러스터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뉴시스

“고령자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 시급”

박용근 도의원, 5분 발언서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노인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인보행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22.25%로 전국평균인 17.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서는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은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노령보행자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해 특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1,088명 중 87.5%가 노인이었다는 통계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박용근 도의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음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2번째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설치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액되어 전북도가 노인 보행안전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용근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보호구역 내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속도 장비, 속도 제한 및 횡단 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령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지점인 전통시장, 병원이나 약국 주변 또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으로!